

추석, 그리고 2020 총선 관전법

무등칼럼



김종식
이사 겸 마케팅사업본부장

충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지역 정치인들에게는 그렇다. 올 추석 연휴는 총선 출사표로 고심하는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중차대하다. 자신의 얼굴과 이름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회자될 바람에다. 시간의 여유가 좀 있지만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총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먼저 중앙정치 지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처리되느냐가 가장 큰 상수다. 현재 의원 300명을 유지 하되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이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상정된 안은 일정부분 전국 지지율을 가진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적극 찬성하고 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바른미래나 평화당, (가)대안정치연대 등 제3지대 정당출현의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선거법 개정안이 의석수를 대폭 늘리거나, 현행 선거구제로 회귀할 경우의 수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준연동형제'를 적극 반대

하고, 민주당내에서도 일부 반대파가 있어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그러면 제3지대의 영역이 좁아지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양대 축으로 정계개편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또한 중앙정치 지형의 상수다. 현재 대통령 지지도는 50%를 전후해 지지와 반대로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내년 총선 전까지 경제·대북·외교 문제 등 국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지지도가 추락할 것이다. 당장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관련한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추석 민심을 어디로 흐르게 할지 속단할 수 없다.

이같은 중앙정치 상수에 따른 지역 정치의 변수도 만만치 않다. 현재 광주·전남 18개 지역구는 민주당 3석, 대안정치 8석, 바른미래 4석, 무소속 3석, 평화당 1석의 분포다. 우선 가장 큰 변수는 지역민들의 몰표현상이 내년 총선에도 나타나느냐다. 19대 때는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20대 때는 국민의당(현 바른미래, 평화당, 대안정치) 쏠림이 극에 달했다. 만약 중앙정치 상수인 준연동형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3지대 정당이 어느정도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희박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구도 정계개편이 이뤄질 경우 지역민심은 민주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또하나 예측가능한 경우는 문 정권의 인기가 낮아지고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경우 지역민의 민주당 표결집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 당시 '호남정치복원' 등을 믿고 국민의당에 몰표를 주었음에도 사본오열을 겪고 있다. 국민의당 지역의원들이 제3지대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또다시 '힘 있는 여

당'대 '제3지대 대안론'이 충돌할 경우 지역민의 민주당 표결집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 경우 무소속 선전도 기대된다.

네 번째, 대안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창당하느냐도 변수다. 다선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나 참신한 인재영입 등 지역 유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경우 민주당 쏠림이 가속화 될 것이다. 지역정치권에서 마지막 변수는 민주당의 공천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공천하느냐에 따라 풍향계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과거 지역의 투표 경향성에서 보듯이 민주당 공천은 민주당 대세나 비민주당 세력과의 접전이나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다.

이 같이 내년 총선의 중앙정치 상수와 지역정치 변수를 볼 때,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2020 총선 호남의 선택, 뉴DJ를 키우자'라는 타이틀의 무등일보 총선기획보도는 시의 적절하다. '누가 뭐냐'는 그 첫 걸음이다.

무등일보가 던지는 화두는 명확하다. 총선 때마다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을 향해 '호남정치 복원' 'DJ정신 계승' '지역 정치발전' 등을 호소하며 표를 구했다.

하지만 당선되면 호남정치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하는 정치 행태를 보여왔다. 각종 현안과 관련,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치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호남정치의 미래를 위해, 뉴DJ를 키우기 위해 옥석을 가리자는 것이다. 적절한 시기의 여론조사와 후보자에 대한 검증·분석 보도도 뒤따를 예정이다. 2020 총선까지 7개월 간 무등일보의 선거보도 여정이 기대된다.

주민 현안 사업 놓고 갈팡질팡하는 해남군

기자의 논



박혁
해남지역 담당(국장)

행정은 일관성과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행정은 이같은 필수요건이 결여될 경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온다.

이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 주체인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

해남군이 최근 추진 중인 각종 주민 현안사업의 행태를 보면 일관성 없는 행정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해남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지난 6월 군의회에서 논란 끝에 부결됐다.

그러나 군은 2개월 만에 군의회에 다시 예산

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 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로컬푸드사업을 재추진했다.

또 '작은영화관 사업'은 지난 2016년 부지 부적격 등의 사유로 군의회에서 부결돼 국비를 반납했다가 지난해 청소년복합문화센터와 복합형태로 건립하겠다고 군의회에 상정,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군은 이에 대해 두 사업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재추진 명분을 밝혔다.

하지만 로컬푸드사업의 경우 군의회에서 부결된지 불과 2개월 만에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안을 상정한 후 1명의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다.

모든 군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주민 입장에서 모든 방향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사업이 중단되거나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하지만 무조건 국비를 받았다고 현실성이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군의회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하는 의원들은 보는 시각과 견해가 다를 수도 있으나 장기적 안목을 갖고 주민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작은영화관 사업으로 선정된 부지는 지난해 군 공영주차장으로 2천961㎡의 부지를 15억7천여만원에 매입해 2억4천여만원을 투입해 아스콘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작은영화관 부지로 확정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어찌 됐건 두 사업에 대한 해남군의 최근 행보는 무리수를 둔 행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결국 일관성 없는 행정은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우려가 높다.

해남군과 군의회는 로컬푸드사업과 작은영화관 사업에 대한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철저히 분석, 신중하게 사업을 집행하기를 바란다.

발언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SPO(학교전담경찰관)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마다 활기가 넘치고 학생들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등교하지만 SPO(학교전담경찰관)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긴장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학교폭력의 형태를 보면 최초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공갈, 상해,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폭력유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부모가 알 수 있는 피해 학생의 징후로는 이유 없이 학교가 싫어하고 전학을 보내 달라고 하

거나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는 경우, 갑자기 용돈을 많이 달라고 하거나 게임을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를 키우거나 아이템을 모으는데 집착하는 것 등이다.

이 경우에는 자녀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설득한 후 피해 학생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게끔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하지만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와 대화를 잘 하려 하지 않고 물어봐도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서는 '스마트 안전드림'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사용방법은 부모와 자녀의 스마트폰에 각각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학

부모 스마트폰에서 학부모모드를 실행하고 자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면 그때부터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자녀 스마트폰 문자나 메시지에 옥션, 파퓰리즘 등 학교폭력 의심문자가 감지되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자녀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학교폭력, 교우관계, 자살, 범죄 등을 검색할 경우 고민단어를 감지하여 부모의 스마트폰에 정보를 제공해 준다.

경찰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시 피해자에게는 면담을 통한 추가 피해사실 확인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변보호를, 가해자에게는 선도 및 재발방지를 위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근택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사설

광주시내 건축물, 불법증축·용도변경 수두룩

서구 클럽 붕괴사고를 계기로 광주시가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모두 76곳에서 불법증축과 용도변경 등 132건의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주요 위법내용을 보면 기존 건물의 공지나 주차장을 증축해 음식점 주차장이 창고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증축이 태반이었다. 사고가 난 클럽의 유형인 영업허가 후 영업장 내부를 구조 변경하거나 불법 증축한 사례도 확인됐다.

안전도시를 자처하던 광주에서 서구 클럽 붕괴사고는 큰 충격이었다. 얼마나 많은 건물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시민들은 불안해 했다. 이런 불안을 잠재우고자 광주시가 특별 점검을 벌였지만 예상대로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이 판을 치고 있었다. 서구 클럽의 대형사고는 불법 건축을 묵인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번 광주시의 특별 점검에서도 적잖은 건물이 서구 클럽의 사고 유형을 닮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런 불법 건축물들은 언제든 대형사고로 이어 질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건축물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영업허가를 받은 뒤 내

부를 구조 변경하는데는 관할 지자체 조례의 허점이 한 몫했다. 여기에 사고 클럽의 예에서 보듯 형식적인 사후 관리감독도 문제를 키운 요인이었다. 서구 사고 클럽은 층허용 업소 지정후 객석 면적을 명기하도록 돼 있었지만 업소 운영 이후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의 확인 기록없이 업소 자체 기록만으로 대신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 이같은 허술한 관리가 사고를 키웠다.

광주시는 드러난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예외없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 점검에서 확인하지 못한 노래방이나 PC방 등의 불법 사항 또한 기초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점검을 계속하기 바란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생활주변의 건물 안전은 아직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안전도시 명에 실추된 상황에서 이번 점검을 바탕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사안별 특별 점검이 아니라 상시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관과 업주와 유착 의혹이 일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류세 인하 종료되자 순식간에 오른 기름값

내릴 때는 부지하세월이지만 오르는 건 순식간이었다. 유류세 인하 기간 종료에 따라 기름값이 일제히 경종 뒤편었다. 서민가계의 부담을 한시적이나마 줄여주고자 했던 정부의 복안은 서민들이 별다른 인화 효과를 느껴보기도 전에 끝나고 말았다. 정유업체와 주유업체의 쟁쟁 기름값 인상 때문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던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달 31일 종료되면서 1일부터 정상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인하 조치 종료 이전만 해도 광주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천400원대 전방, 경유는 1천200원대 전방이었다. 그러나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곧바로 휘발유 1천400원대 후반, 경유 1천200원대 후반으로 돌아섰다. 휘발유가격만 해도 1천500원대로 뛰어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3일 현재 광주 북구의 한 셀프주유소는 휘발유의 경우 1천492원, 경유 1천329원 등으로 가격차가 붙었다. 유류세 인하 종료 전까지 가장 싼 가격에 주유할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난 주유소였다. 이곳마저도 유가가 눈에 띄게 오르면서 주유를 하려는 이

들이 줄어드는 등 유가 인상은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날 광산 지역의 한 주유소 유가는 1천639원으로 1천700원 돌파를 눈앞에 두었다고 한다.

화물차 영업을 하는 한 자영업자는 이를 두고 "유류가격이 광주에서 가장 싸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 놀랐다"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가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아 걱정된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서민들의 불만은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보다 주유업체의 알뜰한 상술에 대한 비난으로 모아진다. 국제 유가 인하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유가 인하는 때맞춰 시행하는 사례가 드물거나 하지 못해 찜찜 내리다가 그 반대의 경우는 한순간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중순 이후 유가가 슬금슬금 오르는 기미를 보여오던 터였다. 마치 인하 조치 종료를 기다렸다는 듯 상승폭이 커졌다. 청개구리식 가격 조정에 대한 불만은 물론 담합 의혹마저 불러 일으키는 주유업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동맹과 국익

지소미아가 한·미·일 간 뜨거운 감자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을 의미하는 영어 이름의 약칭이다.

동맹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러시아 등 33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고, 일본은 미국, 영국 등 7개국과 지소미아를 맺었다. 한일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23일 체결했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고,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최근 아베 정권이 과거사 문제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무역 보복에 나서면서 민감한 지소미아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양국 간 신뢰훼손을 근거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처음에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한국 정부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면서 종료 결정 철회 '압박' 수준을 넘어 '갑박'을 서슴지

않는 미국의 태도에 걱정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한국만 비판하면서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고 있는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를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행보를 지켜보면서, 50년 동맹국으로서 "그것은 아니지"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고뇌의 찬 결단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다. 침묵하고 있던 북한도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남조선(한국) 민심의 반영으로서 응당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일본과 미국을 비판했다.

당분간 한미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미국과 일본의 일방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태도에 끌려다니는 수는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했을 수 없다"고 단호한 의사를 밝혔다. 백년 우애의 말이 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할 말을 한' 문재인 정부를 시·도민들이 지지하고 있는지 모른다.

류성훈 사회부 부장 rsh@srb.co.kr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

회장 조덕선 사장 발행·편집인 장인준 주필 김영태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우) 61234 광주 서구 재봉로 324(중흥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대표전화 (062) 606-7700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구독신청 (062)606-7776

편집부 (062)606-7750 정치부 (062)606-7730 경제부 (062)606-7713 사회부 (062)606-7722 지역사회부 (062)606-7723
문화체육부 (062)606-7737 사진부 (062)606-7762 뉴미디어부 (062)606-7760 서울지사 (02)313-1681 서신부 (062)606-7723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원 | 독자재보 062-606-7722·FAX 062-606-8765 | E-mail mdil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i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ilbo770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사랑방 뉴스를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